

脫우리 非민주... 방황하는 수도권 호남표심

5·31 지방선거 현장

박광태 후보 "선관위 편파단속"

민주·개혁세력 지지 성향의 수도권 호남 표심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황하고 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으로 인한 민주·개혁세력의 분열과 여권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쳐 '탈 열린우리당, 비 민주당'의 성향을 보이며 대거 부동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거 부동층 이동... 일부 한나라당 유입도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핵심 변수될 듯

특히 갈 곳을 찾지 못한 수도권 호남 표심은 한나라당으로 유입되는 이례적인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최근 광주일보와 조선일보가 겹잡아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지역 호남 출신 유권자 가운데 39.7%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반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33.8%에 그쳤다. 민주당 박주선 후보는 호남 출신 유권자로부터 5.8%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경기지역 호남 출신 유권자 가운데 한나라당 김

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무려 26.2%로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지지 비율 32.6%에 육박했다. 서울신문이 지난 8일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호남 출신 유권자의 부동층은 36.7%로 일반 부동층 비율 2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표심의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지지율은 18.1%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열린우리당의 무능력과 민주당의 무비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호남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경제 문제 등 국정 운영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이 호남 표심에 폭넓게 확산됐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개혁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인식은 호남 표심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이후 미니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도 환골탈태를 통한 비전 제시보다는 당내 분

쟁과 함께 광주·전남지역에 매몰되는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호남 표심의 외면을 받고 있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 이탈한 호남 표심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층으로 흡수되거나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호남표심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열린당이 최근 호남 표심 구애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이 문제가 20여일 사이에 풀이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결국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호남 표심은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광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측은 9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이중적 편파단속을 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 후보측은 "열린우리당 조영택 예비후보가 광주시장 각 실과를 방문한 것은 호법방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확실한데도 조 후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않고 '구두 경고'만 했다"면서 "야당후보는 관례상 제공한 초콜릿까지도 문제삼아 기소하면서도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약한 조치를 하는 것은 편파단속"이라고 주장했다.

박용두 후보 보성·순천시 지지 호소

○박용두 민주노동당 전남지사 후보는 9일 보성군민체육대회에 참가해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어 단병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수·광양·순천지역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순천후보선출대회'에 참가했다.

국창근씨 "당 화합·단결위해 최선"

○국창근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9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가 임박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 간 화합과 단결"이라며 "구당(救黨)의 일념으로 민주당안에서 성내평화(Burgfriede)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민주당 후보 승리를 위해 어디든 달려가겠으며 선거 이후에는 당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도민과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유두석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장성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두석 예비후보는 10일 오후 2시 농협장성군지부 앞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유 후보는 이날 '장성과의 약속' 조인식을 갖고 장성 발전 비전과 공약실천의 자를 다진다.

반명환 의장, 송광운 후보 지지 선언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이 1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반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해왔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송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송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당 필승을 위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영호 의원, 남구청장 출마 선언

○최영호 광주시의회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 4천여명의 후원당원과 함께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구청장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은 지역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채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밀실공천을 함으로써 탈락 후보들이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무소속 청년희망 연대를 선언하며, 기존 정당 조직의 틀에서 벗어나 고 건 전총리와 강문태 전 국회의원 등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김씨 구입 CD30억 용처 추적 정치권 '부동산發 로비 태풍'?

김현재 삼흥그룹회장 기소

기획부동산의 원조로 통하던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사진)이 회사 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부동산발(發) 정치권 로비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영암 출신인 김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일부 여권 인사들과 폭넓게 교제했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작년까지 해도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권에 발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결과 횡령액 중 215억원은 세금, 계열사 지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쓰였지만, 30억원은 양도성 예금증서(CD)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나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2003년부터 CD 거래...돈세탁 가능성=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본격적으로 CD를 사고 팔았다. 김씨는 2001년과 2002년 각각 256억원과 696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도 CD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CD에 눈독을 들였다. 검찰 관계자도 "돈 세탁 냄새가 난다"며 용처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다수의 여권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냈고, 호남 출신 기업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들과도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대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정치자금에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적도 있다.

김씨는 2004년 초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탈세,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고 영장까지 청구 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풀려난 전력이 있다. <사업 관련 뇌물, 또는 정치자금?=>김씨가 대규모 기획부동산 사업을 벌이면서 비자금을 만들어 정·관계에 뿌렸다면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가 지자체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공을 들였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빠른 시일 내 사들였던 땅을 고가에 처분하면 그만큼 이윤이 오랜 시간 로비를 하며 실제로 개발 호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불법 정치자금에 쓰였다면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3년이라 상당 부분이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 정부의 여권 인사가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에 칼 쓴 입당식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호타이어와 화물연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9일 오전 민주당 입당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한 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목에 칼을 쓴채 입당식을 가졌다. /위정욱기자 jrwi@kwangju.co.kr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주도권 잡기

박근혜대표 개헌 언급 배경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008년 총선후 개헌 추진' 화두를 던졌다. 박 대표의 개헌관련 언급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논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개헌논의의 공론화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는 지방선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제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확실한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분석이다. 또 여권이 개헌논의를 들고 나올 경우

한나라당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차기 총선 후 개헌의 근거로서 타임밍상의 적절성을 들었다. 박 대표는 또 올해 지방선거 후 개헌을 추진하면 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논의가 정략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는 만큼 개헌추진 시점을 뒤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저런 이유에서 박 대표는 각 정당이 내년 대선 때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 2008년 총선 후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의견은 '지방선거 후 개헌논의를 시작해 내년 대선부터 적용하자'는 여당측의 구상과는 시점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 박 대표 자신이 과거 밝혔던 입장과도 일면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04년 4월 "오는 2008년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동시에 끝나 는 만큼 개헌논의에 적기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여당측의 주장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